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 성적 이미지·영상 전송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와 정책대응 방안

초록

- 최근 아동·청소년이 랜덤채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소통 과정에서 성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사건에 대한 보도로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음.
- 그러나 이들이 어떤 경로로 온라인상 성학대와 성착취를 당하는지, 피해 이후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련된 실상을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함.
- 섹스팅을 아동·청소년이 섹슈얼리티를 탐색하는 발달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자가 되는 주요 경로와 피해 이후 대응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살펴봄. 또한, 아동·청소년 섹스팅 관련 성학대와 성착취 피해에 대한 주요 관련자들의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부모, 교육기관 종사자,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와 전문가,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음.
- 이를 토대로 ① 신고를 포기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구제, ②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경찰 수사개선사항, ③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사항, ④ 부가통신사업자의 관심 제고 및 역할 활성화, ⑤ 온라인 성착취 대응 조직과 제도 개선, ⑥ 자녀 휴대폰 모니터링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 ⑦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적 접근 방법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함.

1. 배경 및 문제점

-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피해에 대해 여러 가지 사건이 보도되지만, 피해 당하는 경로나 피해 이후 대응과 관련된 실상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함.
-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섹스팅과 이와 관련된 온라인 성착취 피해 경로, 피해 현황, 피해 이후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2. 연구방법

● 심층 면접

1) 아동·청소년 심층 면접

- ▶ 조사방법 : 대면 및 전화 인터뷰
- ▶ 조사기간 : 2021년 8월 2일 ~ 9월 17일
- ▶ 조사대상 : 만 19세 미만 청소년 6명과 만 19세 이상 청소년(만 1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5명
- ▶ 조사내용 : 아동·청소년의 모바일 기기 사용과 이에 대한 인식,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온라인 성착취 피해 내용

2) 부모 심층 면접

- ▶ 조사방법: 전화면담
- ▶ 조사기간: 2021년 7월 30일 ~ 9월 17일
- ▶ 조사대상: 만 14세 ~ 만 18세이하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11명(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부모 포함)
- ▶ 조사내용: 모바일 사용 및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부모의 인식, 피해 대응과 지원 상 문제점

3) 교육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 ▶ 조사방법: 전화상담
- ▶ 조사기간: 2021년 6월 21 ~ 7월 13일
- ▶ 조사대상: 교육기관의 관계자 11명
 - 위(Wee) 클래스 상담사 6명, 교육지원청 장학사 3명, 보건교사 1명, 변호사 1명
- ▶ 조사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피해의 내용과 교육기관의 대응 및 지원

4) 민간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 ▶ 조사방법: 대면 및 전화면담
- ▶ 조사기간: 2021년 6월 9일 ~ 10월 20일
- ▶ 조사대상: 피해자 지원 기관(인권센터,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소 등) 종사자 등 전문가 총 19명
- ▶ 조사내용: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지원내용, 피면담자의 담당 업무, 이용자가 센터를 찾은 경로, 피해자 서비스 니즈,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5)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심층면접

- ▶ 조사방법: 전화면담
- ▶ 조사기간: 2021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 조사대상: 통합 해바라기센터 7명, 아동 해바라기센터 3명으로 총 10명
- ▶ 조사내용: 센터 이용 경로, 피해 내용 및 양상, 피해자 서비스 니즈,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6) 수사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 ▶ 조사방법: 전화면담
- ▶ 조사기간: 2021년 8월 말 ~ 9월 중순
- ▶ 조사대상: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소속 경찰 11명
- ▶ 조사내용: 담당 업무,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사건 수사 경험,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 교육 훈련 등 개선 사항

3. 조사결과

● 아동·청소년 지원단체 등 종사자 인터뷰

1)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현황

-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 비중이 70~80%인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온라인상에서 성착취 피해자가 되는 경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 텔레그램, 게임 등에서 이루어지는 채팅이나 틱톡 등에서 주고받는 쪽지임.
- 온라인 그루밍으로 시작된 성착취는 유포·협박에 의해 오프라인 피해로 이어지기도 함.
-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자신의 사진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해 주고, 유포 정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는 것임.
- 피해자 대부분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길 원하는데, 부모 고지와 관련하여 경찰, 병원, 피해자 지원기관의 방침이 통일되지 않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2) 교사 등 학교의 대응

- 성평등 학교로 지정된 경우, 사건 처리를 피해자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일부 교사는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자를 원인 제공자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
- 학교 평판을 생각하여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경향이 보이는 곳도 있음. 이처럼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교육 관계자의 지지 기반은 미흡한 것이 현실임.

3) 경찰의 대응 및 업무 처리 방식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특히 보호자 고지 부분에 대해 일선 경찰은 아동·청소년 사건을 접수하면 법적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것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사건에 대한 대응 지침이 경찰 내부에서도 정리되지 않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음.

4) 삭제와 차단 관련 협조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 비중이 70~80%인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 디지털 성착취물이 재유포되거나 피해자 신상정보가 알려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하지만,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기반 사이트는 운영자 재량에 따라 협조 정도가 다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자율규제 형태로 성범죄 피해 촬영물의 삭제 요청을 해당 사이트에 하는데, 해외 사이트에 대한 강제권은 없으므로 호스트의 재량에 따라 삭제 여부가 결정됨.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인터뷰

1) 피해사례 접수 경로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사례는 피해 당사자보다 부모 인지로 해바라기센터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 가끔 피해 아동·청소년이 직접 전화 상담을 하기도 있는데, 보호자 모르게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모의 인지 없이 상담이나 수사 등 이후 과정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진술 녹화를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학교 선생님을 통해 접수된 학생 피해 사건의 경우 진행에 대해 교사가 문의하기도 함.

2) 상담·치료 지원

- 피해사례가 접수 이후 진술 녹화가 종료되면, 피해 아동·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초기상담이 진행됨.
- 초기상담 이후 지속 상담이 결정되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 치료가 진행됨.
- 피해 당사자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도 진행이 됨.
- 피해 아동·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교육, 심리상담 외에 삭제 지원기관과의 연계도 이루어짐.

3) 피해자 지원 개선사항

-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될 사항으로 예방 교육이 제시됨.
 - 아동·청소년에게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사용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에 대한 교육은 미진한 상태임. 모바일이나 인터넷 기기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 온라인그루밍 위험에 대한 교육,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예방에 있어, 보다 현실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또래 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 피해사례 제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하고 예방하는 것이 요구됨.
 -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중요함.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발생하면, 범죄 피해자임을 명확히 알게하는 교육이 필요함.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개입에 의한 상담 관리과 부모-자녀 간 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자발적 성착취물 제공자로 보는 인식을 불식하고, 이들이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 및 수사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온라인 성착취 사건 관련 경찰 수사 현황

1) 피해자 중심의 수사 체계 정비

-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중심을 두는 수사 목적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 수사는 피해자 보호·지원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진행해야 하는데, 현행 수사 체계에서 이것이 잘 준수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 주체가 연령, 장애여부, 성착취물 배포 여부 등에 따라 경찰서와 지방청, 사이버와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로 구분되는데, 피해자의 고충, 혼란,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사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2) 수사 전문성 강화 교육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교육이 시행되어야 함.
 - 교육내용에 급속히 진화하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 양상이 반영되어야 함.
- 관련 범죄수사 교육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이를 향후 교육에 반영해야 함.
 - 현장에 기반한 세부적 수사 방법과 최신 범죄 동향을 매뉴얼에 포함하기 어려운데, 이를 공유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3) 제도 효과성 및 운영 방법 점검

-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방어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보호자 통지 및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의 효과성과 운영 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미성년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4) 수사관에 대한 지원 강화

-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건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온라인 성착취,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가 높아 경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업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고, 스트레스 수준과 업무 강도가 높아 기피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온라인 성착취 범죄 수사 과정은 경찰에게 스트레스와 충격을 주고 해당 업무에서의 이탈로 이어져 수사 전문가 양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인력 충원, 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함께 담당 경찰관의 정신건강 회복과 관련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4. 정책제언

● 정책개선방안

1) 신고를 포기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구제

● 보호자 통지를 거부하는 피해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은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많음.
-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한다고 활동가들이 전함. 부모의 이러한 반응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이들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와 지원을 포기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은 채 다른 범죄를 시도할 것이고, 피해자는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해 효과적 치유회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음.

● 보호자 통지를 의무로 하는 범죄수사규칙 개정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개정이 필요함.
- 법정대리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미성년자가 이들에게 알리거나 도움받는 것을 거부하면 이들의 개입 없이 미성년자가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사진행 통보는 피해자 권리행사를 위한 것

- 경찰수사규칙 제79조와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원칙을 명시하며 피해자 명예와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함을 보여줌.
- 수사 과정이나 결과의 통지가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린다면 금지되어야 함.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 개정의 필요성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는데, 이의 개정이 요구됨.
- 형법에서 의제강간 연령을 만16세 미만과 만13세 미만으로 이원화하는데, 해당 법 조항에서 만13세 미만은 성적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만13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게 무조건 통지하고, 만13세 이상은 법률대리인이나 상담원 등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전제로 하여 그들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미성년자 의사결정능력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뢰관계인을 통해 미성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경찰 수사개선사항

● 경찰 수사체계의 역량 강화

-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의 최우선 목표는 피해자 보호·지원과 권리보장인데, 이의 준수가 가능한지 수사 체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신고 채널이 다양한데 향후 신고체계를 단순화시켜 이를 널리 홍보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함.
- 새롭게 발생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해서 범행 예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범행 예측 업무에 투입될 수사 인력이 증원되어야 함.
-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새로운 범죄 양상이 반영된 교육 자료가 생성되어야 함.
- 인력 충원, 인센티브 제공, 담당 수사관 소진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효과적 위장수사의 방향

-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건을 접수하는 수사기관이나 음란물 유포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사자의 성인지감수성 제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3)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사항

●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예비 음모죄 필요

- 온라인 성착취 또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예비, 음모죄 처벌 필요성이 큼.
- 그루밍을 시작하거나 적어도 청소년보호법상 디지털 성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카메라 이용 촬영물 등 반포 등,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등) 예비와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함.

● 음란이나 성적 수치심을 명확한 용어로 개정해야 함

- 음란 표현물을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지나치게 표현·묘사’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참조)과 같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 대신 ‘성적 부위나 성적 행위 또는 이에 준하거나 성적 부위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등의 행위나 표현’과 같이 명확하고 중립적인 용어로 개정할 필요가 큼.

3. 정책제언

- 섹스팅 처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승인에 의한 아동·청소년이 한 촬영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의 규정이나 이러한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규정 등을 보완한다면 처벌은 물론 보호처분의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이 섹스팅과 관련되어 처벌되면 성범죄자 신상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지 않도록 해야 함.

4) 부가통신사업자의 관심 제고 및 역할 활성화

-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 피해 예방을 위해 자율규제가 활성화가 중요한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정착시켜야 함.

- 부가통신사업자 역할의 중요성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이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업무수행 중 인지하게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거나 온라인 그루밍이 의심되면 행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함.

5) 자녀 휴대폰 모니터링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피해 예방 방안으로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과 호주 사례와 같이 아동·청소년 연령대별로 부모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온라인상 성착취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특정 유해 앱에 대해서는 필수적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함.

6)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적 접근

●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 교육’ 강화

-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교육은 이들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일임. 온오프라인에서 장난으로 하는 사소한 일이 타인의 권리·자유를 침해하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기본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 학생 간 사건 처리에서 있어서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

- 학교 내 학생 간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가해 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체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가해 청소년의 처벌도 징벌보다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치유회복과 교육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함.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